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공동주최

한국인은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분석

날짜: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한국인은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분석

날짜: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사회: 김주형(서울대)

14:00-14:05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5 인사말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14:15-14:30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제1세션 14:40-15:40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 및 평가

- 윤광일(숙명여대) : 선거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 이상신(통일연구원) :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제2세션 16:00-17:30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과 정치개혁 방향

- 좌 장: 임경훈(서울대)
- 토 론: 김아람(제주평화연구원), 김정현(연세대),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송지연(서울대)

*국회도서관 제2문(회의참석자용)으로 입장해주십시오.

*국회도서관 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십시오.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 평가

선거경쟁과 참여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연구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2024년 민주주의 인식조사: 조사개요 및 선거와 참여 민주주의 인식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2024년 11월 20일

한국 민주주의 인식 조사 필요성

-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대표성 있는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밝히고, 다양한 전문가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함.
 - 첫째, 민주주의 제도적 측면과 제도 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여 산출하는 민주주의 지수들이 측정 기관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다르게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시민의 이해가 한국 민주주의 운영의 실체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음.
 - 셋째,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 운영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목소리를 기초로 할 필요가 있음.

기존 한국 민주주의 조사 결과

• 기존 전문가 조사 결과와 함의

- V-Dem : 한국은 2022년 자유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8위, 일본(27위)보다 낮고 대만(30위)보다 높음; 선거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9위로 일본(23위)과 대만(24위) 두 국가 모두에 비해 뒤처짐.
-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같은 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4위로 대만 10위, 일본 16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됨.
-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이하 IDEA)의 세계 민주주의 상황 지수(GSoD: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ex): 참여의 경우 대만은 4위, 일본은 52위, 한국은 45위이며, 대표성의 경우 대만은 17위, 일본은 29위, 한국은 31위, 권리의 경우 대만은 22위, 일본은 16위, 한국은 35위, 법치의 경우 대만은 15위, 일본은 18위, 한국은 28위로 민주주의 측정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일본과 대만에 크게 뒤쳐진다고 평가되고 있음.
- 결국,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이들 세 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이들 세 지수가 상당한 수의 측정지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혼란을 가중

3

V-Dem 소개

• 다차원적 접근

- 민주주의사상가와 이론가들은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모호한 개념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Democracy writ-large)'가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 예컨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예로 상정됨(Gallie 1956). 그럼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 무한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님.
- 선행연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7가지 핵심 원칙 즉 선거, 자유, 다수주의, 합의, 참여, 숙의, 평등주의로 구성됨.
- 국민에 의한 통치에 대한 각기 다른 방식에 대한 이해는 이들 원칙에 대해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둔다는 사실에 기인함. 따라서 어느 한 원칙이 민주주의의 모든 의미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이들 원칙에 기반한 다차원적 접근과 측정은 오늘날 통용되는 민주주의 개념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4

V-Dem 소개

• 측정 방식

-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 들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latent) 개념임.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분석, 종합하여 이러한 잠재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본 가정 하에,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에 정통한 대략 5명의 전문가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변화 상황을 측정함.
-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 대학 the V-Dem Institute의 주도 하에 4 천2백여명의 국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1789년부터 현재까지 20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과학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 민주주의의 5가지 상위 원칙을 선거, 자유, 참여, 숙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원칙을 측정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시민사회, 법률 시스템과 관련된 450개 이상의 특정 지표(indicator)와 50개 이상의 다양한 지수(index)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전문가 조사로서 주관적 인식과 평가 문항과 사실 여부나 관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응답의 불확실성을 0에서 100% 구간을 활용하여 병기함.
- 예테보리 대학 외에 European Research Council, NSF, Kellogg Institute, European Commission, Facebook 등 수십개 정부, 민간 단체의 연구 후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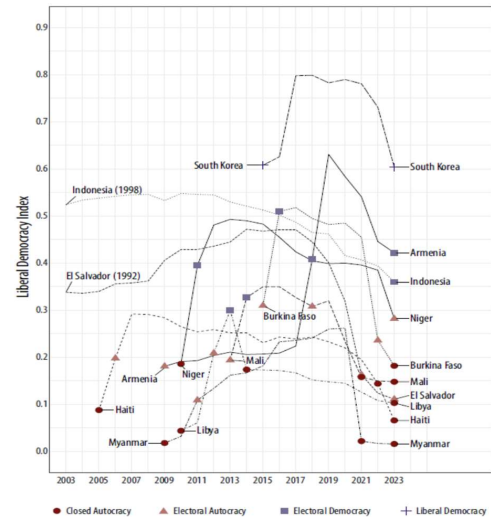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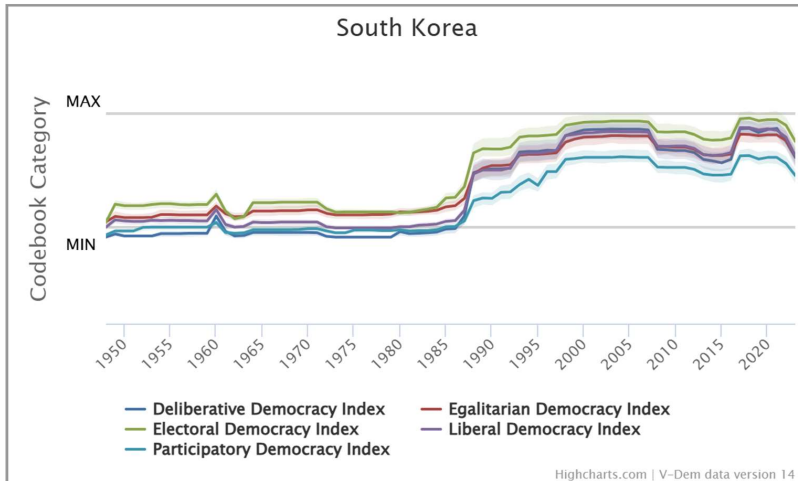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7원칙 (V-Dem)

- 자유(liberal)
- 평등(egalitarian)
- 숙의(deliberative)
- 선거(electoral)
- 참여(participatory)
- 다수주의(majoritarian)
- 합의(consens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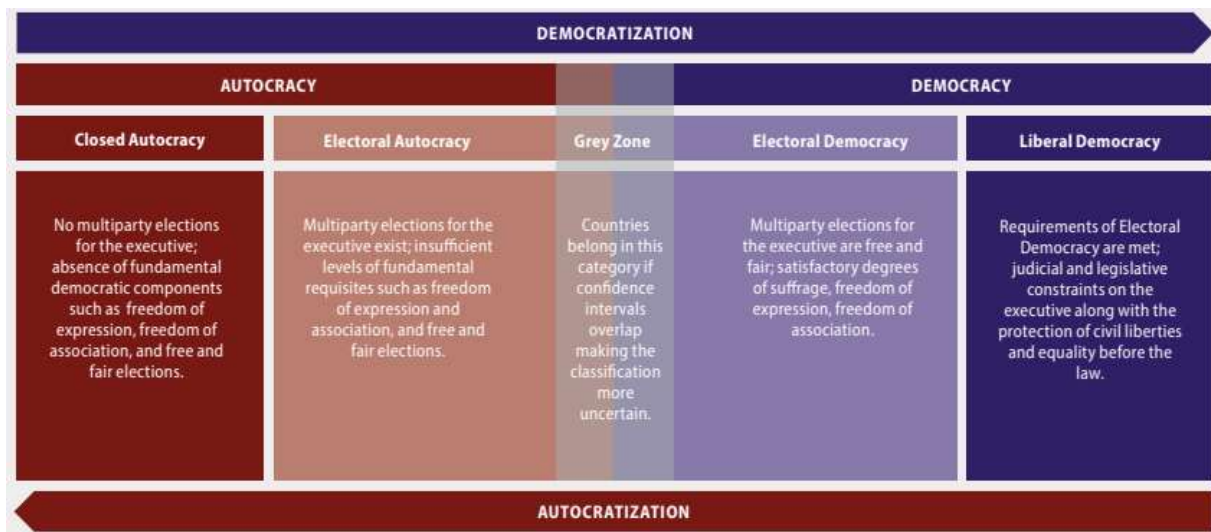
6

V-Dem 한국 민주주의의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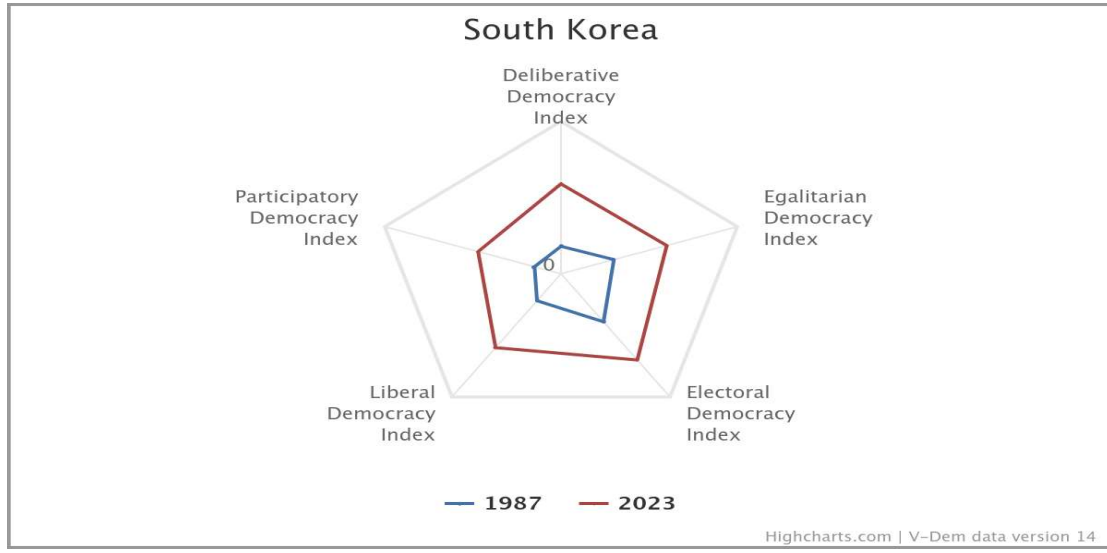
7

V-Dem: Democracy vs. Aut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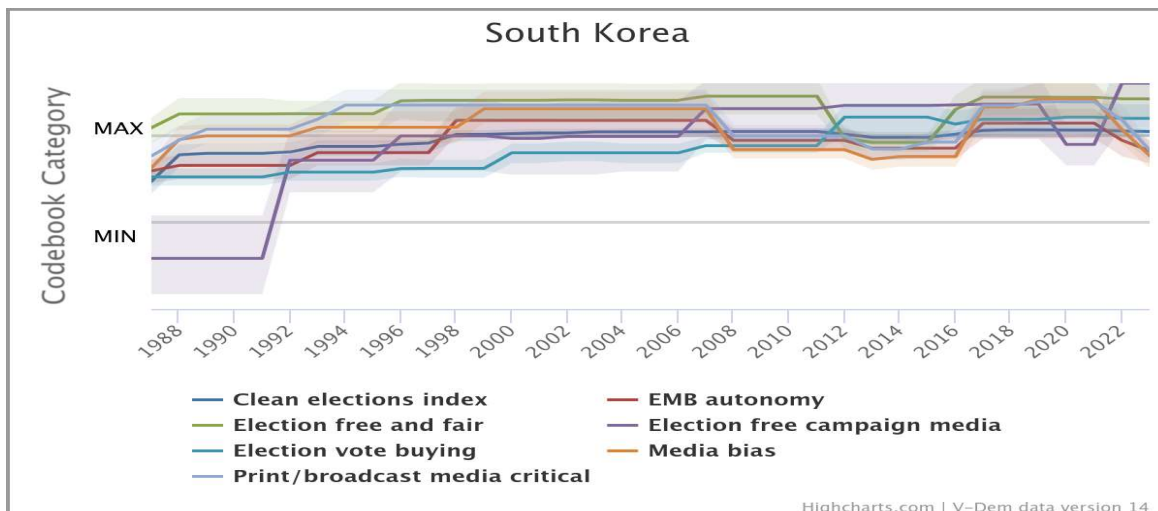


8

V-Dem 한국 민주주의의 1987년과 2023년 비교



V-Dem 한국 선거민주주의의 지수, 1987-2023



한국 민주주의 인식 조사

• 설문 구성

- 민주주의 관련 실증적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전문가 조사 연구인 V-Dem의 설문 문항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기존 다국가 정치·사회 인식/태도 설문 조사 자료 문항을 보완했음.
- World Values Survey
- Asian Barometer
-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각종 한국 선거 사전 사후 조사
- 그 외 민주주의 인식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문항으로서 개인차 정치심리 변인(정당지지, 투표, 성격 특성 등)과 사회경제변수를 추가했음
- V-Dem은 전문가 조사용으로 본 조사에서는 문항 개발에 있어서 최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되 일반 시민 대상 조사인 만큼 자구와 전체적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했음

1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 틀	2024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표집 방법	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단위	총 1,003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PI: 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2024년 7월 9일 ~ 8월 9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12

민주주의 인식

- 민주주의 요소별 필요도 인식
- 민주주의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인식
- 한국 민주주의 평가 및 만족도
- 각국 민주주의 평가
- 민주주의, 독재, 전문가, 군부 통치 선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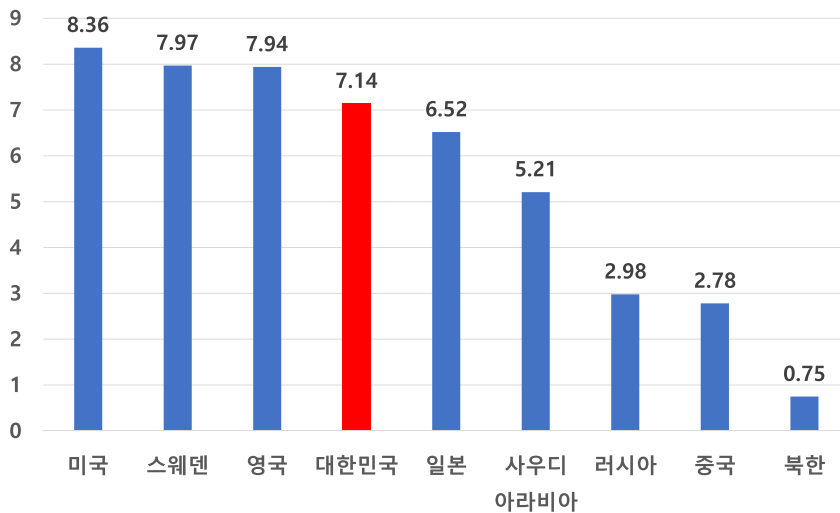
민주주의 필수 요소(10점 만점)



- 선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데에 대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흥미로움
-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민주주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엿보임

14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 평가(10점 만점)



- 대체로 전문가 평가와 유사
- 미국 호감도 반영
-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교적 높은 순위는 민주주의 평가 기준이 전문가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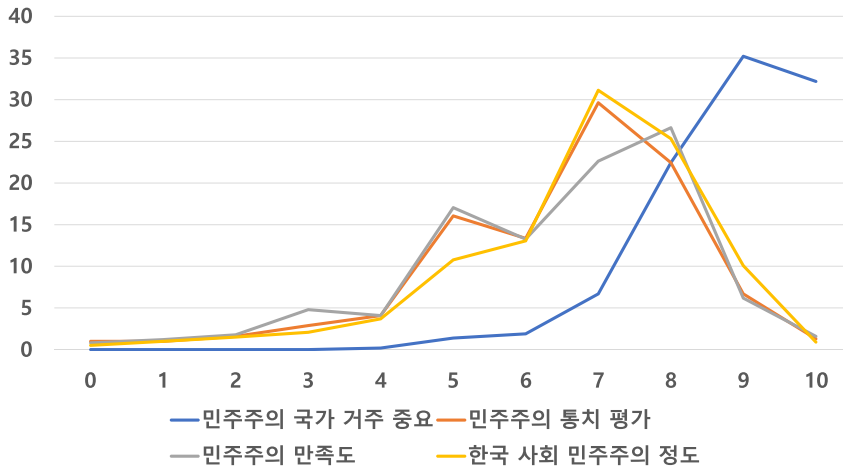
15

V-Dem 2023년 민주주의 순위

순위	국가	선거	자유	참여	숙의	평등
1	스웨덴	0.884	0.852	0.631	0.797	0.798
2	영국	0.852	0.772	0.609	0.725	0.704
3	미국	0.848	0.772	0.606	0.716	0.602
4	대만	0.823	0.722	0.644	0.73	0.741
5	일본	0.818	0.731	0.524	0.728	0.745
6	한국	0.703	0.604	0.466	0.591	0.602
7	러시아	0.19	0.062	0.126	0.075	0.132
8	북한	0.084	0.015	0.045	0.014	0.088
9	중국	0.074	0.037	0.036	0.103	0.085
10	사우디 아라비아	0.015	0.046	0.022	0.062	0.1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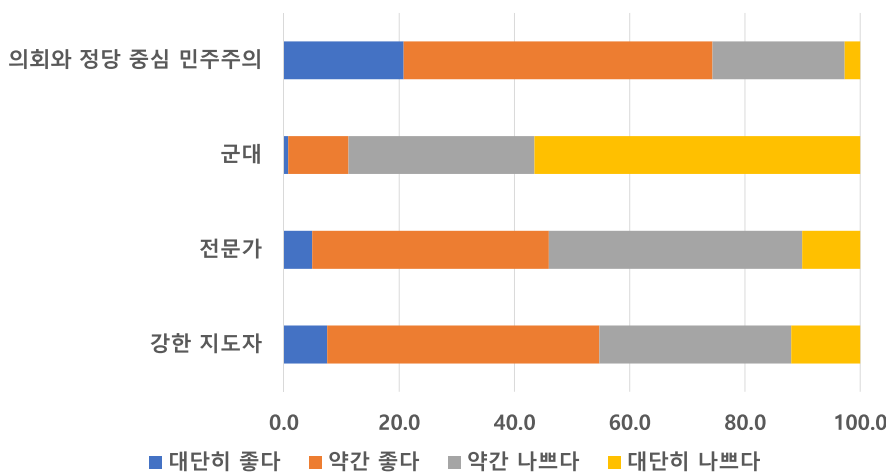
현재 한국 민주주의 평가와 만족도(10점 만점)



- 대체로 긍정적
-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특히 중요(M=8.84)
-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M=6.43)
- 현재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라는 평가(M=6.77)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평가보다 약간 높음(M=6.4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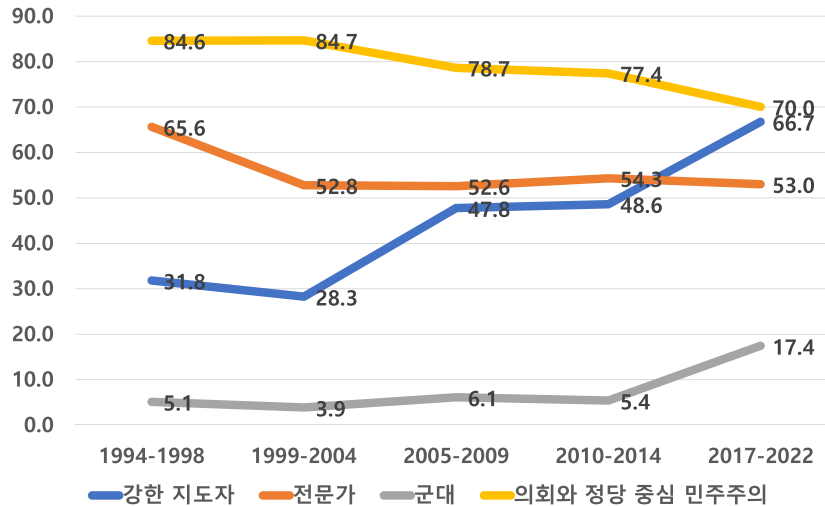
통치 방법 선호



- 각 통치 방법에 대한 4점 척도 선호 측정
-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74.4%) 군대 통치 선호가 매우 낮음(11.2%).
- 강한 지도자(54.7%)와 전문가 선호(46.0%)도 높은 편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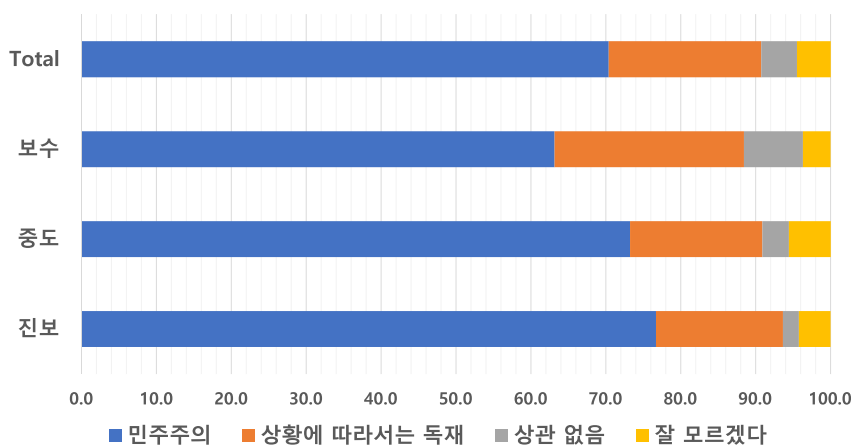
통치 방법 선호 : 세계 가치관 조사 1994 - 2022



- 민주주의 인식 조사보다 강한 지도자 선호가 높음
- 민주주의 선호 하락세와 강한 지도자 선호 상승세
- 강한 지도자와 전문가 선호도 높은 편임
- 군대 통치 선호도 낮지 않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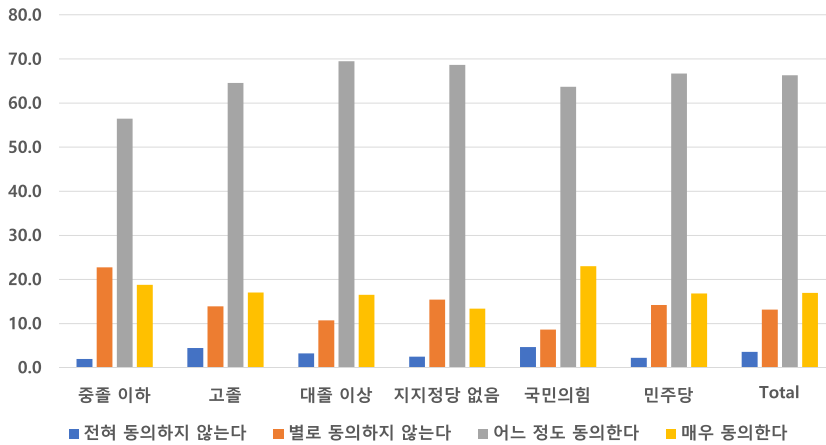
통치 체제 선호 : 민주주의 대 상황에 따른 독재



- 통치체제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묻는 질문에서는 독재 선호가 현저히 떨어짐.
- 이념 성향에 따른 선호 차이가 나타남. 보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를 중도나 진보보다 선호
- 성, 교육, 소득수준, 정당에서는 의미 없는 차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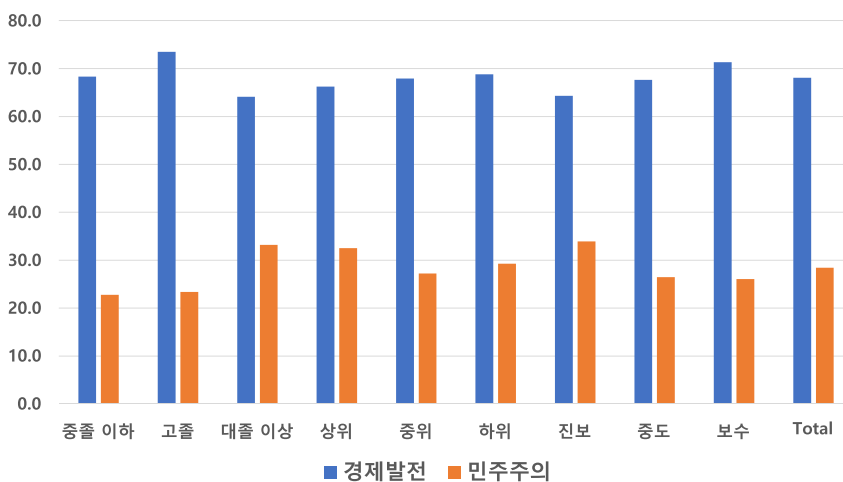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좋은 정부형태이다



- 학력이 높을 수록 현실적인 민주주의 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지 정당이 없거나 민주당 지지가 민주주의 정부 형태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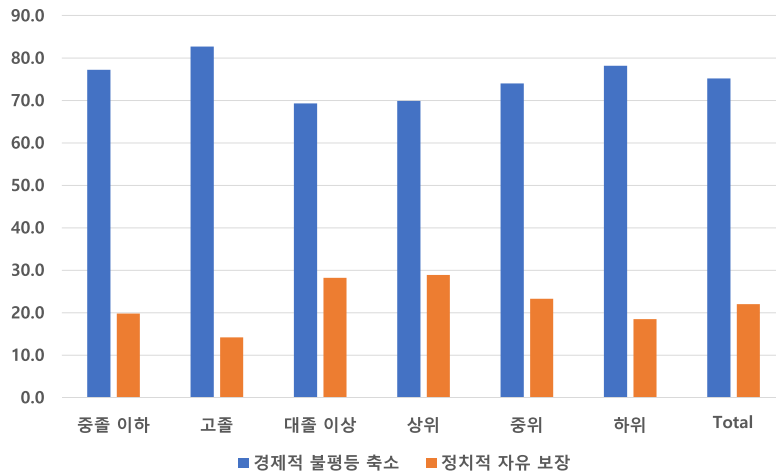
경제발전 대 민주주의



- 성과(performance) 중심 민주주의 관: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
- 학력, 소득,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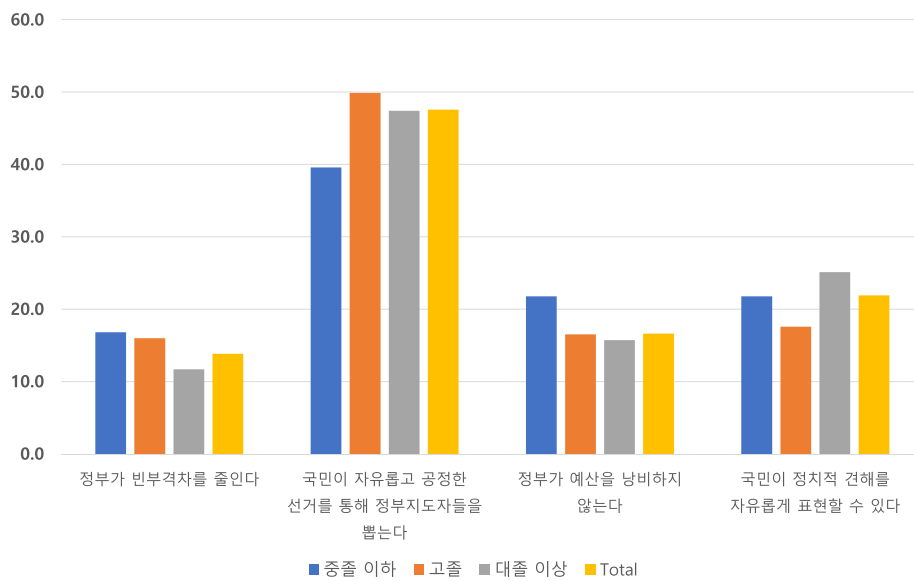
경제적 불평등 축소 대 정치적 자유 보장



- 성과 중심 민주주의 관: 경제적 불평등 축소가 정치적 자유 보장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
- 학력과 소득에 따른 차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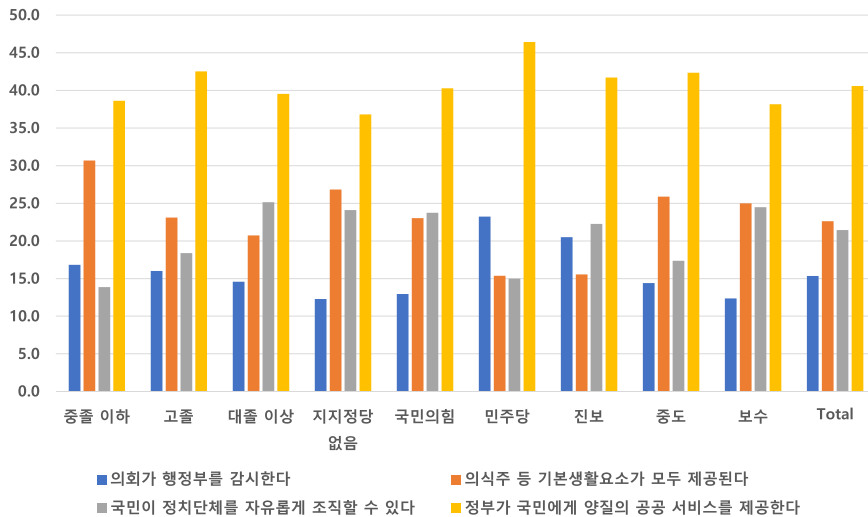
민주주의 필수 요소: 빈부 격차 축소, 공정 선거, 예산 낭비 방지, 표현 자유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한 광범한 합의
- 학력에 따른 차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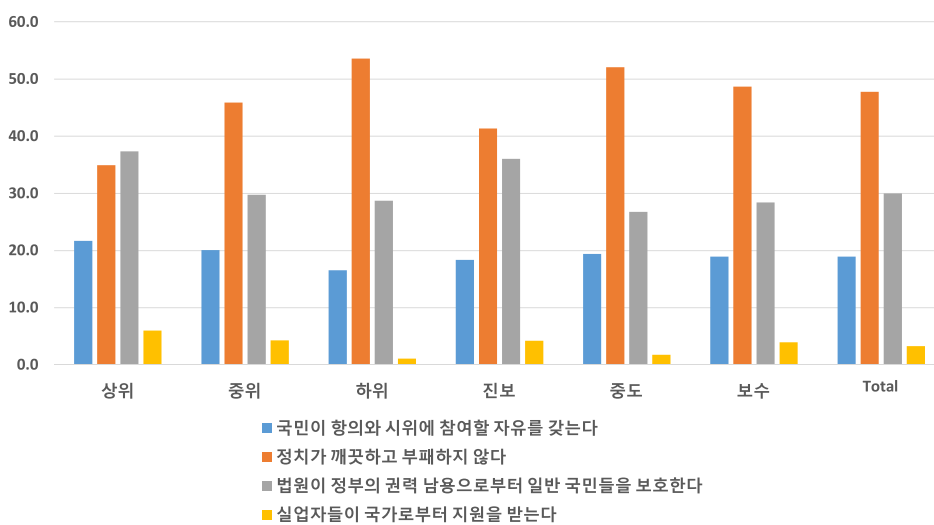
민주주의 필수 요소: 권력 분립, 기본생활 요소 제공, 결사 자유, 공공 서비스



- 성과 중심의 민주주의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음
- 학력, 지지 정당, 이념에 따른 차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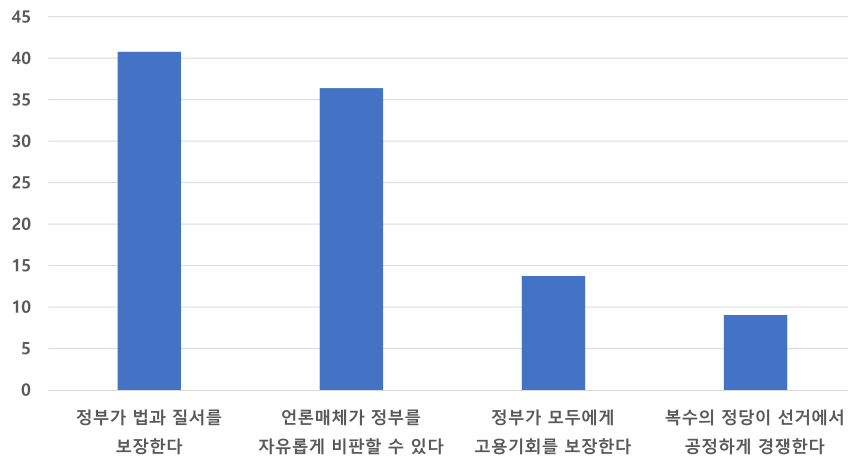
민주주의 필수 요소: 시위 자유, 청렴 정치, 법원, 실업자 국가 지원



- 도덕적 민주주의관: 청렴 정치에 대한 지지 높음
- 소득과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

26

민주주의 필수 요소: 법과 질서, 언론 자유, 고용 기회 보장, 복수 정당



- 성과 중심의 민주주의관: 법과 질서 보장에 대한 높은 지지
-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 나타 내지 않음

27

선거

• V-Dem의 선거 principle

- 민주주의의 선거 원칙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치자들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달(Dahl, 1971, 1989)의 "폴리아키(polyarchy)" 개념으로 표현한다. 선거 민주주의 측정 지표는 "V-Dem 선거 민주주의 지수"로 부르며, 이는 모든 다른 민주주의 지표에 있어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선거가 없는 체제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 The electoral principle of democracy embodies the core value of making rulers responsive to citizens through periodic elections, as captured by Dahl's (1971, 1989) conceptualization of "polyarchy." Our measure for electoral democracy is called the "V-Dem Electoral Democracy Index." We consider this measure fundamental to all other measures of democracy: we would not call a regime without elections "democratic" in any sense.

28

참여

- V-Dem 의 참여 principle

- 참여 원칙은 모든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치와 적극적인 참여의 가치를 포함한다. 선거 참여도 이 원칙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시민 사회 단체 및 직접 민주주의의 비선거적 및 선거 메커니즘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참여도 중요하다.
- The participatory principle embodies the values of direct rule and active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all political processes. While participation in elections counts toward this principle, it also emphasizes nonelectoral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forms of both nonelectoral and electoral mechanisms of direct democracy.

29

선거 - 정당 관련 인식

- 선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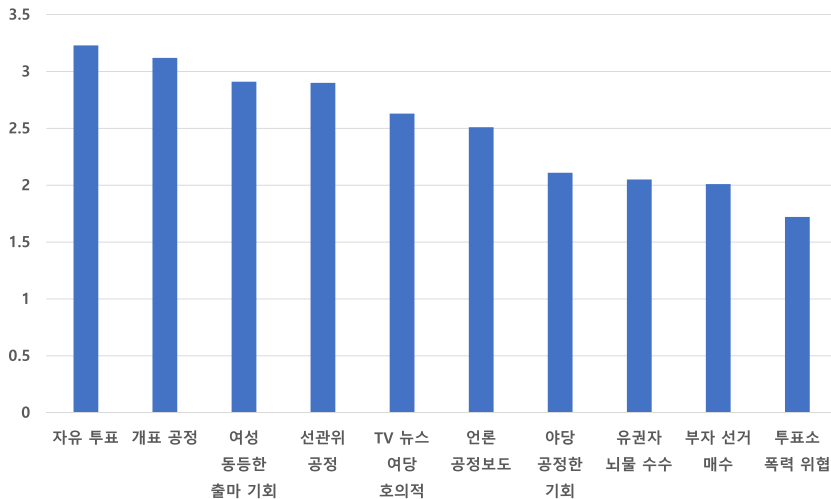
- 선거 의미/ 공정성

- 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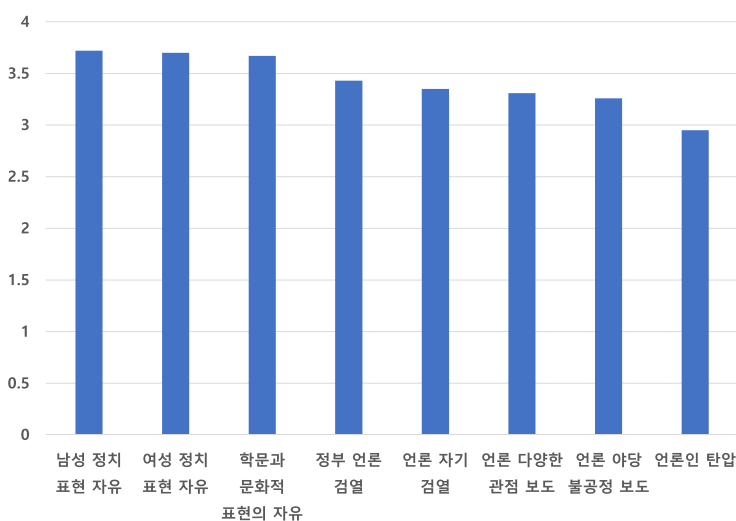
선거 민주주의: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얼마나 자주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4=매우 자주 일어난다)



- 대체로 긍정적(2점 기준)
-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관위 공정성 논란에도 긍정적인 평가
- “야당 후보는 선거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진술에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임
- 유권자가 뇌물을 받거나 부자가 돈으로 선거를 매수한다는 데에도 부정적인데 이는 또 다른 매표 행위 경험 여부 묻는 질문에도 거의 또는 전혀 경험 없는 응답자가 91.2%로 드러나 객관적인 인식으로 보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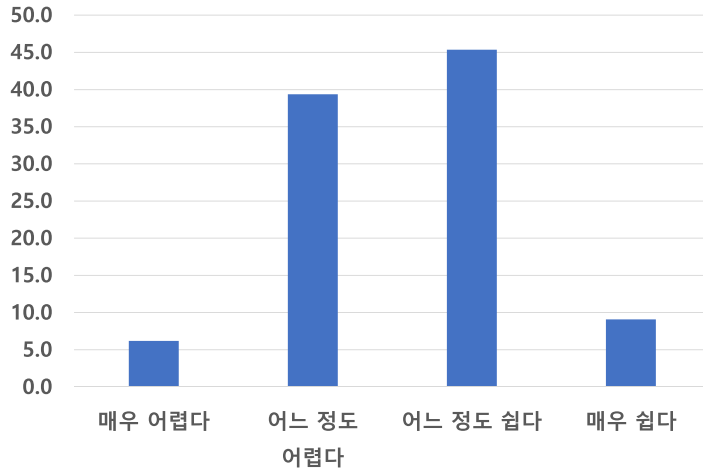
선거 민주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및 공정성(5점 척도 동의 정도)



-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학문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다양한 관점 보도도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정부의 언론 검열, 언론의 자기 검열, 야당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와 언론인 탄압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올해 4월 발표된 IDEA 인식 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함: 한국과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전문가 조사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확신을 갖고 있음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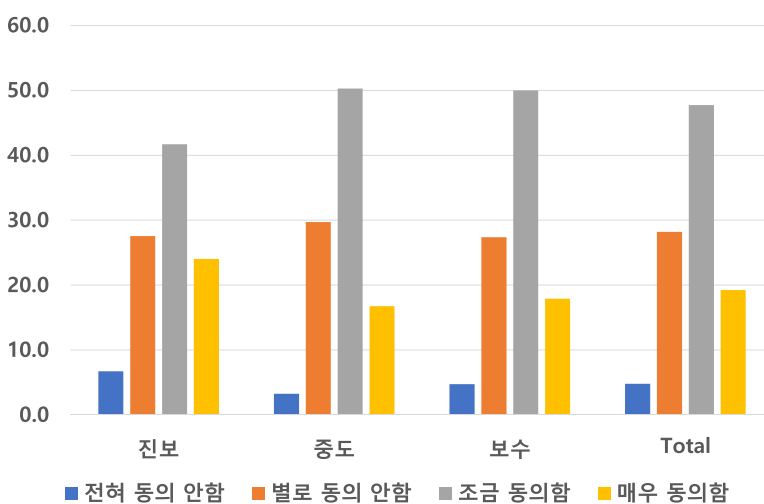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가능성



- 어느 정도 쉽거나 매우 쉽다는 긍정적인 답의 비율이 과반(54.4%)
- 정치 성향과 사회경제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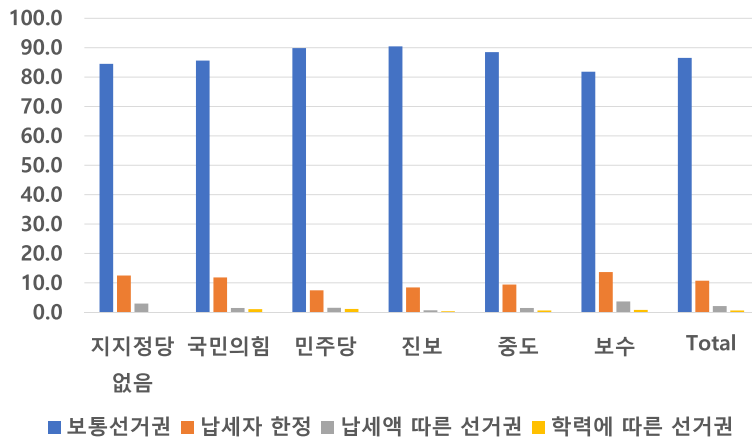
선거 때 말고는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 전체적으로 선거를 유일한 정부 문책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매우 높음(조금 동의+매우 동의=67.0%)
-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유일하게 관찰됨. 진보 성향은 선거 외 정부 문책 수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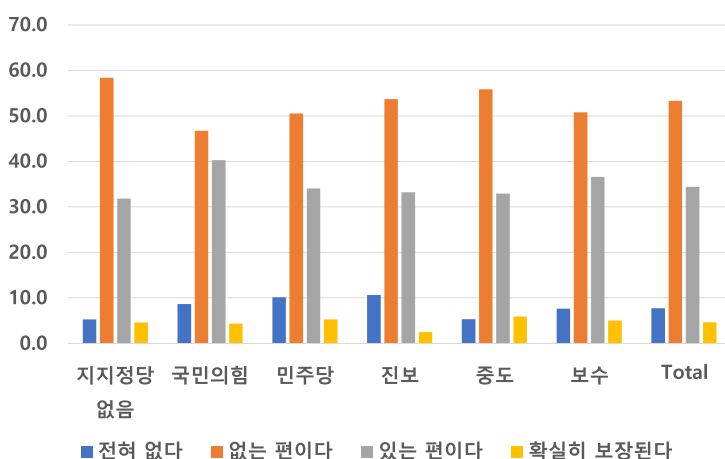
보통 선거권에 대한 의견



- 보통선거권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음
-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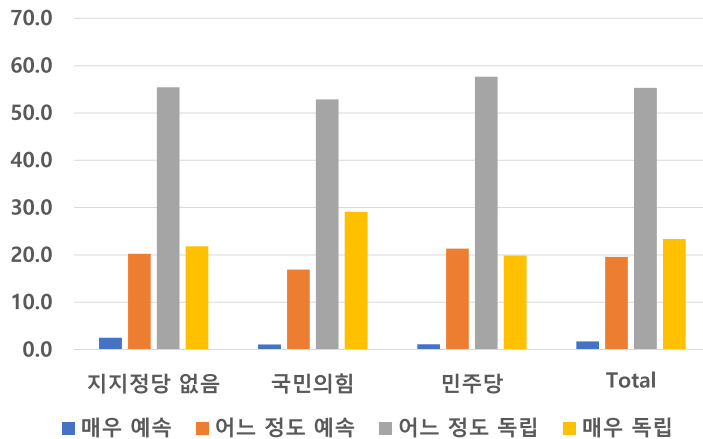
우리나라 선거에서 작은 정당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체로 없다고 생각함
-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와 더불어 민주당 지지 그리고 진보 또는 중도 이념 성향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함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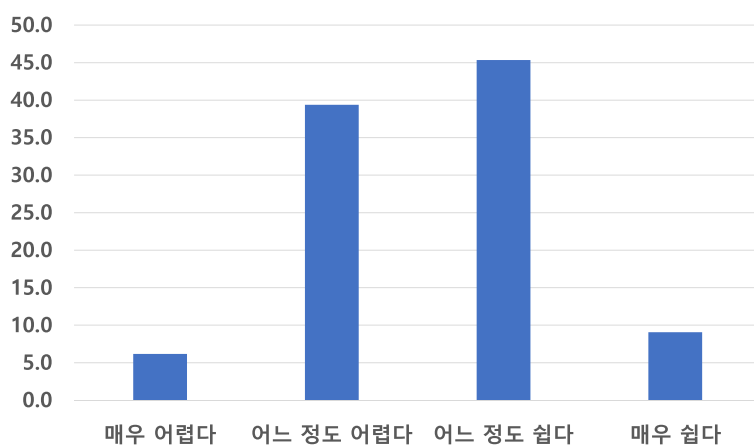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야당들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정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체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함
- 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으나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도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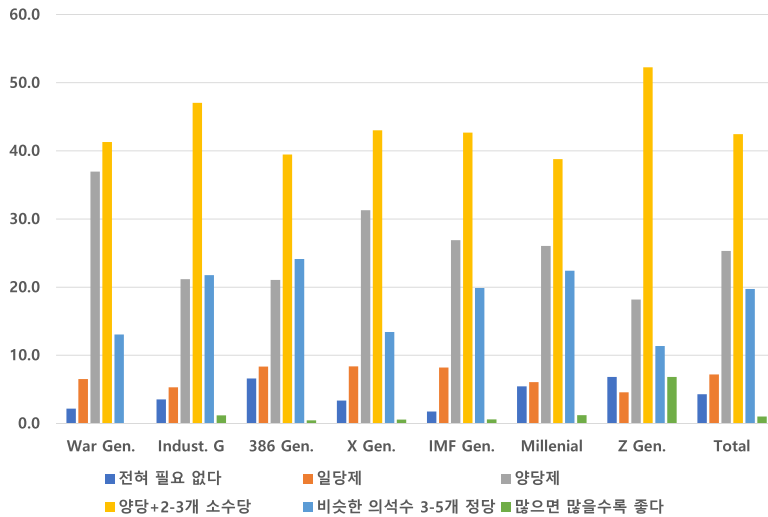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체로 쉽다고 생각함
- 정치 성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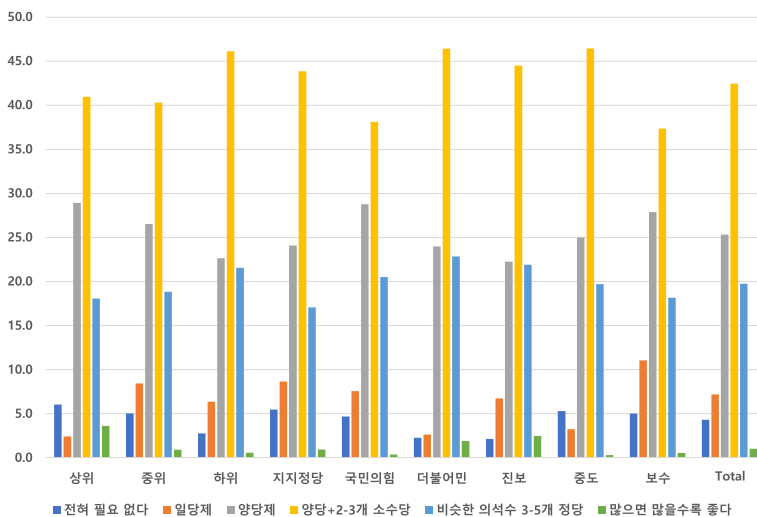
민주주의에 정당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정당체제에 대한 선호가 높거나 기준 효과(anchoring effect)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 세대는 양당제+ 2-3개 소수정당 선호가 두드러짐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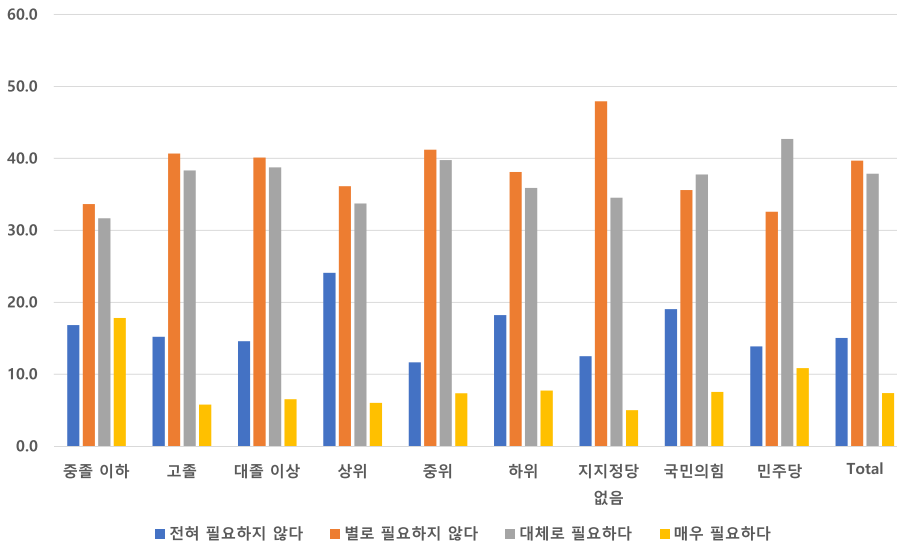
민주주의에 정당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득과 지지 정당 그리고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엿보임
- 소득 하위 계층,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 진보와 중도층의 양당제와 2-3개 소수 정당 지지가 두드러짐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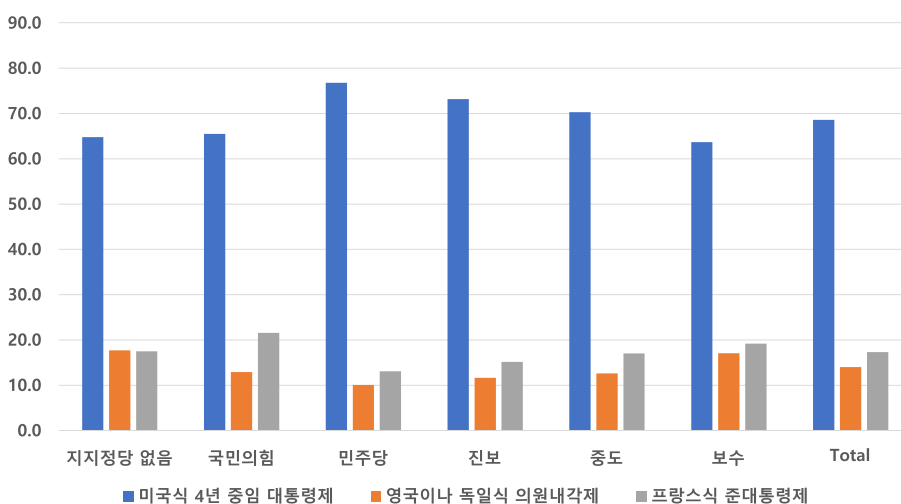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적으로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과반
- 소득, 교육수준,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과반이 개헌 필요성 인식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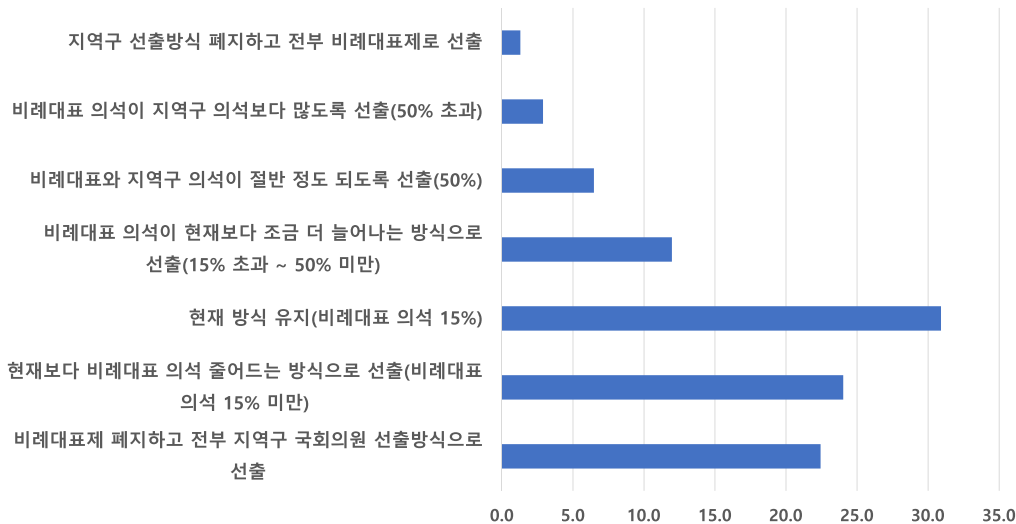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대체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
- 민주당, 진보층의 미국식 대통령제 지지 선호가 두드러짐
- 대통령제(미국식 또는 프랑스식)를 지지하는 경우 현행 상대다수제 선호(82.5%)가 결선투표제(17.5%)보다 월등히 높음.

42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호



-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대표 비율을 선호하는 비율이 제일 높음.
- 비례대표 축소 또는 폐지 선호가 증가 또는 지역구 선출 폐지 선호보다 월등히 높음.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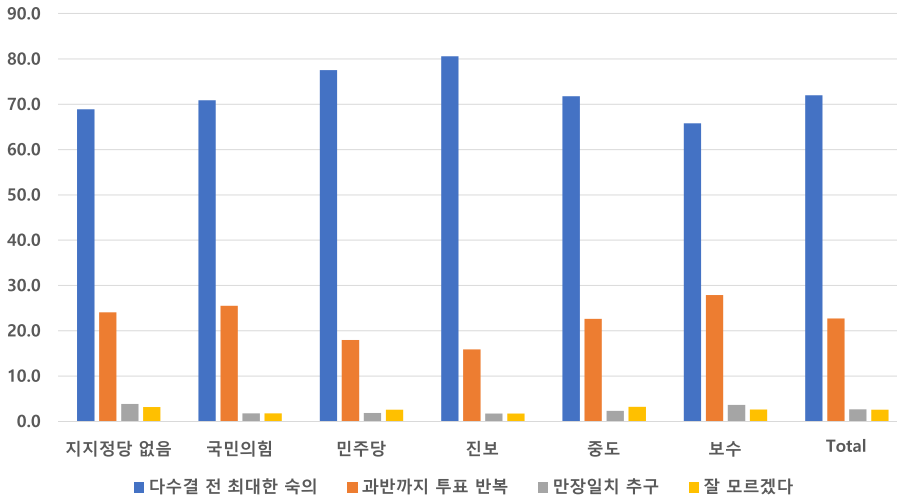
참여 - 다수결 원칙

- 중앙/지방 정부 의사결정 참여

- 시민단체 평가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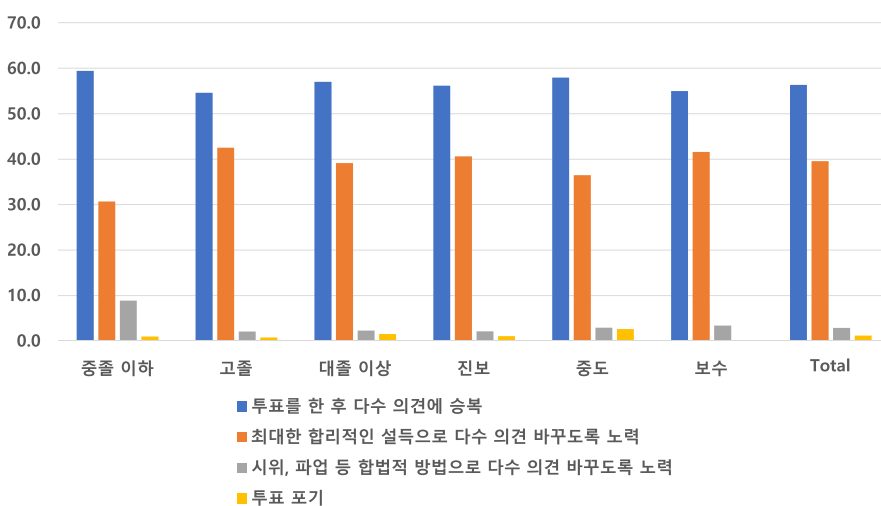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



-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성향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논의한 후 다른 안 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많은 안으로 정하는”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짐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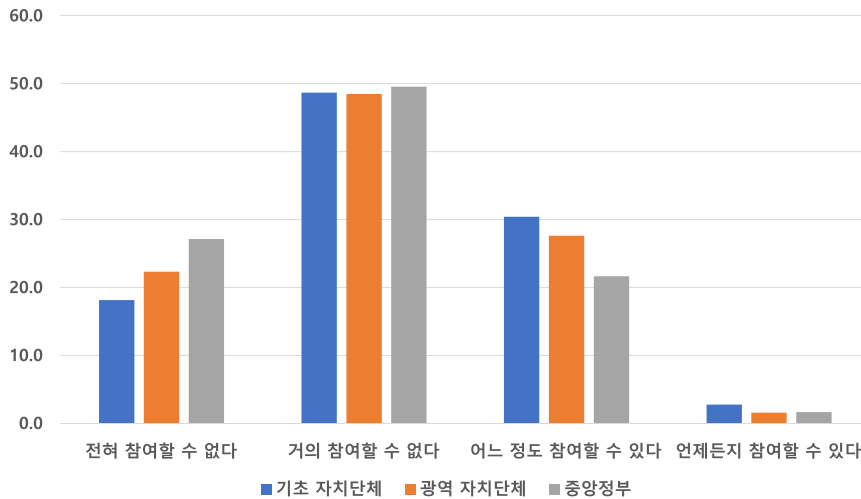
본인과 반대되는 의사를 바꾸는 방법



- 투표 참여 후 다수 의견에 승복 한다는 비율이 60%에 달함
- 공청회, 속의 토론회, 공론화 등 최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바꾸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고졸 이상과 진보와 보수 성향 모두 40% 안팎의 지지를 보임
-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보건의대 '바람직한 응답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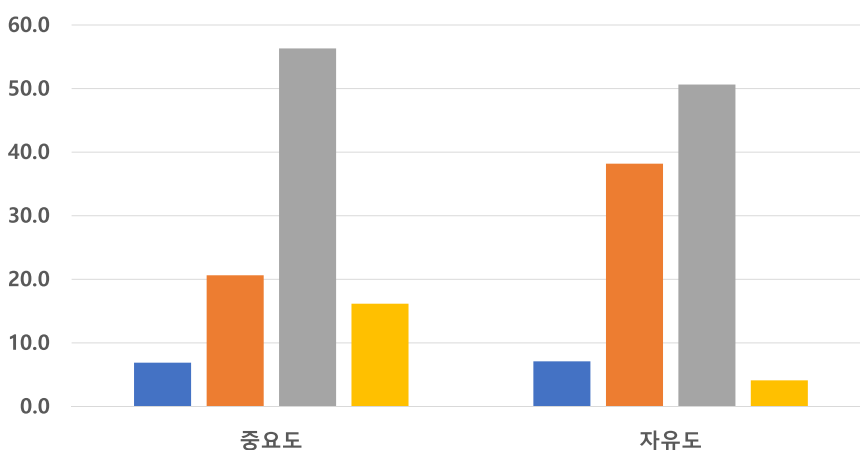
정부 수준별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인식



- 전체적으로는 정부 수준과 상관 없이 참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남
- 다만, 기초>광역>중앙정부 순으로 일상 생활에 가까운 정부일수록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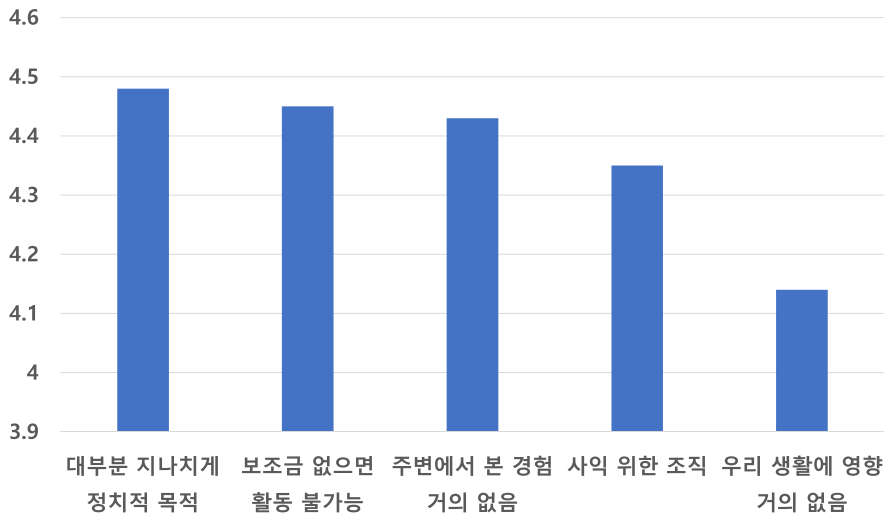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공청회나 설명회 중요도와 참석 자유도 인식(4점 척도)



- 중요도는 '어느 정도 중요'와 '매우 중요'를 합하여 72.5%로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으나 자유도 즉,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자유롭다는 인식이 과반(54.7%)에 머무름
- 즉, 참여의 중요도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여건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8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7점 척도 동의 정도)



- 평균이 동의도 반대도 아닌 것을 가리키는 기준점인 4점 초과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 평가

자유, 평등, 속의

이상신
통일연구원

자유, 평등, 숙의

이상신
통일연구원
2024년 11월 20일



민주주의의 7원칙 (V-Dem)

- 자유(liberal)
- 평등(egalitarian)
- 숙의(deliberative)
- 선거(electoral)
- 참여(participatory)
- 다수주의(majoritarian)
- 합의(consensual)

자유

• V-Dem 의 자유 principle

- 민주주의의 자유주의 원칙은 다수의 폭정과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재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이 원칙은 헌법적으로 보호된 시민의 자유, 강력한 법치주의, 그리고 행정부 권력의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The *liberal* principle of democracy embodies the intrinsic value of protecting individual and minority rights against a potential “tyranny of the majority” and state repression. This principle is achieved through constitutionally-protected civil liberties, strong rule of law, and effective checks and balances that limit the use of executive power.

3

평등

• V-Dem 의 평등 principle

- 평등주의 원칙은 물질적 및 비물질적 불평등이 정치적(선거)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사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집단이 참여하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며, 의제 설정에 기여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실질적 능력을 동등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의 문헌에 따르면, 건강, 교육, 또는 소득의 심각한 불평등은 정치 권력 행사와 정치적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The *egalitarian* principle holds that material and immaterial inequalities inhibit the actual use of formal political (electoral) rights and liberties. Ideally, all groups should enjoy equal *de jure* and *de facto* capabilities to participate; to serve in positions of political power; to put issues on the agenda; and to influence policymaking. Following the literature in this tradition, gross inequalities of health, education, or income are understood to inhibit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and the *de facto* enjoyment of political rights.

4

숙의

- V-Dem 의 숙의 principle
 - 숙의 원칙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결정이 감정적 호소, 집단적 연대, 국지적 이익, 또는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존중과 이성에 기반한 대화를 특징으로 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The *deliberative* principle enshrines the core value that political decisions in pursuit of the public good should be informed by a process characterized by respectful and reason-based dialogue at all levels, rather than by emotional appeals, solidary attachments, parochial interests, or coercion.

5

선거

- V-Dem 의 선거 principle
 - 민주주의의 선거 원칙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치자들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달(Dahl, 1971, 1989)의 "폴리아키(polyarchy)" 개념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거 민주주의 측정 지표는 "V-Dem 선거 민주주의 지수"라고 불리며, 이는 모든 다른 민주주의 지표에 있어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거가 없는 체제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 The electoral principle of democracy embodies the core value of making rulers responsive to citizens through periodic elections, as captured by Dahl's (1971, 1989) conceptualization of "polyarchy." Our measure for electoral democracy is called the "V-Dem Electoral Democracy Index." We consider this measure fundamental to all other measures of democracy: we would not call a regime without elections "democratic" in any sense.

6

참여

- V-Dem 의 참여 principle

- 참여 원칙은 모든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치와 적극적인 참여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선거 참여도 이 원칙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시민 사회 단체 및 직접 민주주의의 비선거적 및 선거적 메커니즘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 The participatory principle embodies the values of direct rule and active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all political processes. While participation in elections counts toward this principle, it also emphasizes nonelectoral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forms of both nonelectoral and electoral mechanisms of direct democracy.

7

자유 - 개인과 소수자의 보호

- 시민의 자유

- 법치주의

- 행정부 권력의 제한

- 견제와 균형

8

자유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행정부의 사법 존중과 법치주의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불만이 존재
 - 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47% 동의
 - 대통령,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은 헌법을 존중한다: 46.2% 동의
 - 정부는 법원의 중요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한다: 51.5% 동의
 - 공무원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엄정하다: 42.1% 동의

9

자유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가능성에 대한 항목들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정적 견해.
- 이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의 문제일 수 있음.
- 야당 지지자들이 특히 정부의 법치주의 원리 훼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 이는 (1) 현 정치구도를 반영한 결과이거나 (2) 혹은 야당지지자들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 이 두 가설을 비교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적 조사가 필요.

10

자유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법률의 난해함,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높음
 - 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집행된다: 44.9% 동의
- 법의 보호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
 - 남성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7.4% 동의
 - 여성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0.2% 동의
 -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젊은 세대일 수록 법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만족도 높음. 이는 법치주의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음을 시사.

11

자유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노예상태 혹은 강제노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율 낮음
 - 성인 남성은 노예 상태나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있다: 6.9% 동의
 - 성인 여성은 노예 상태나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있다: 8.6% 동의
 - 강제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 강제노동의 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음.

12

자유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정치적 폭력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외로 높은 비율로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음
 -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5.4% 동의
 -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40.3% 동의
 - 한국이 민주화되고 경찰 고문등 많은 부분에서 인권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4명 중 1명은 정치적 살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27.5%의 응답자들이 고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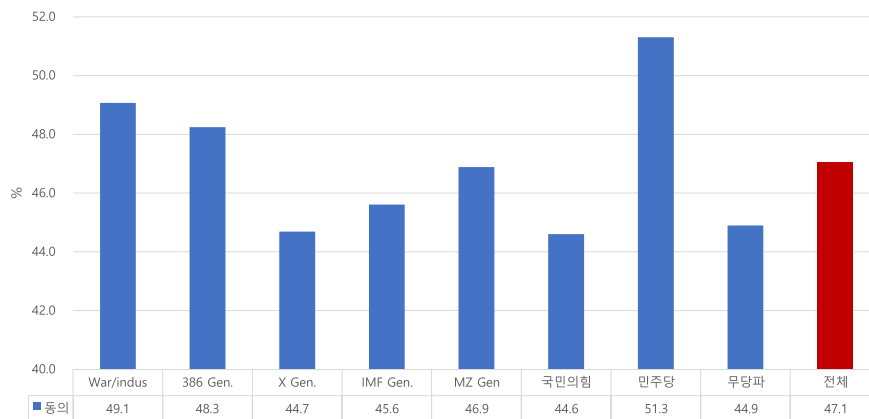
13

자유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정치적 폭력
 - 40년 가까운 민주화 이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정치적 살인에 대한 태도는 특히 놀라운데, 여기에는 각종 가짜뉴스 채널에서 양산되고 있는 음모론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여러 정치적 이슈에서 같은 태도를 보이는 X세대와 IMF 세대가 고문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 이러한 코호트 효과의 원인은 아직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연구가 필요함.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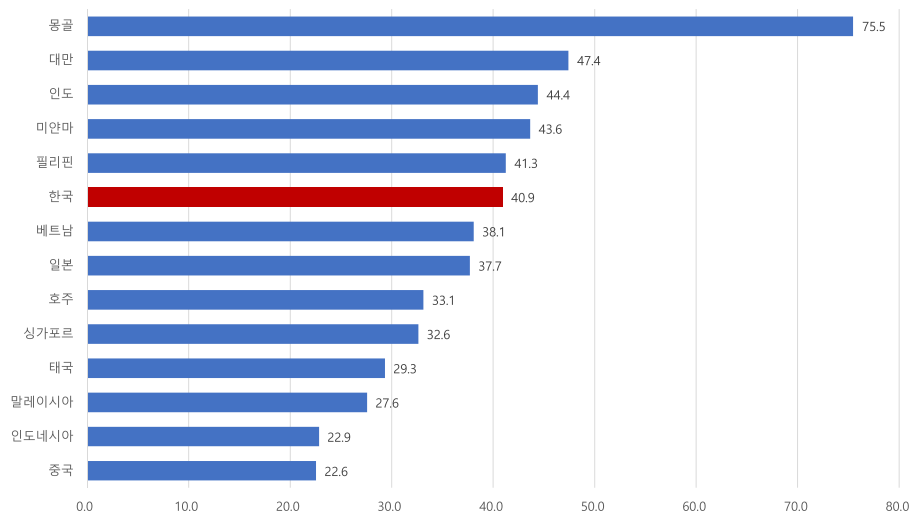
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 민주당 지지자의 동의비율이 국민의힘 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 세대별/성별/교육 수준별 차이 없음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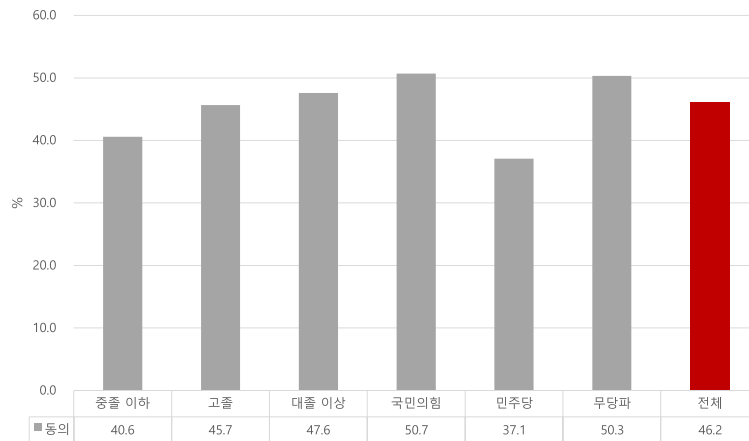
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 Asia Barometer Survey Wave 5 국가별 비교
- 위 문장에 "동의" 한 비율을 그래프에 표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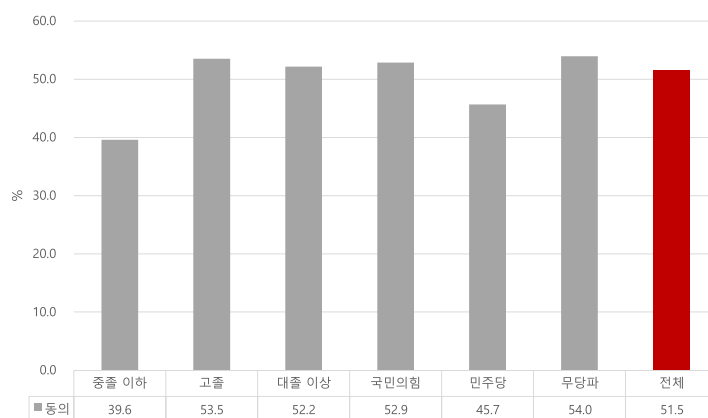
대통령,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은 헌법을 존중한다



- 학력별, 세대별, 성별 차이 없음
- 민주당의 비동의 비율 높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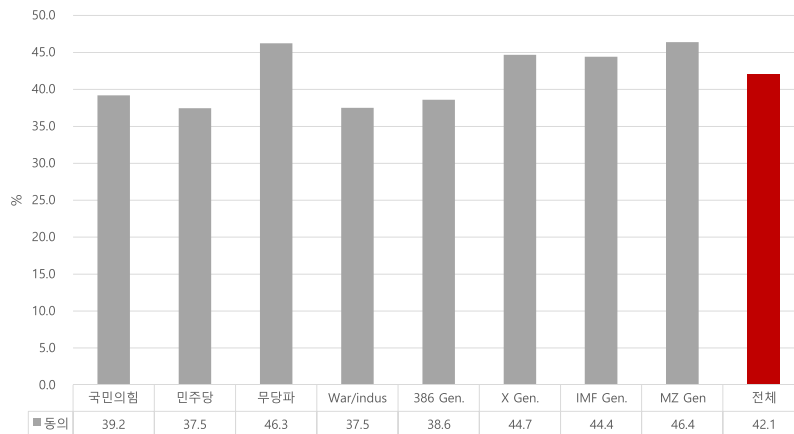
정부는 법원의 중요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한다



- 중졸이하 학력의 동의율 낮음
- 민주당 지지자들의 동의비율 낮음
- 세대별, 성별 차이 없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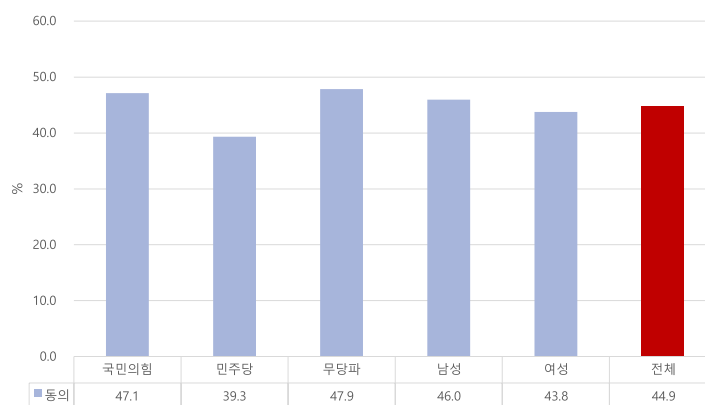
공무원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엄정하다



- 종족이하 동의율 낮음
- 전쟁세대 동의율 낮음
- 무당파 동의율 높음
- 성별차이 없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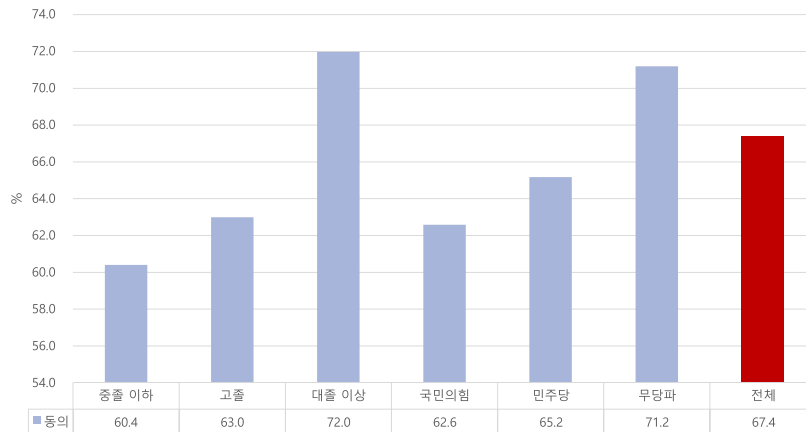
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집행된다



- 학력별, 세대별, 성별 차이 없음
- 민주당의 동의비율이 낮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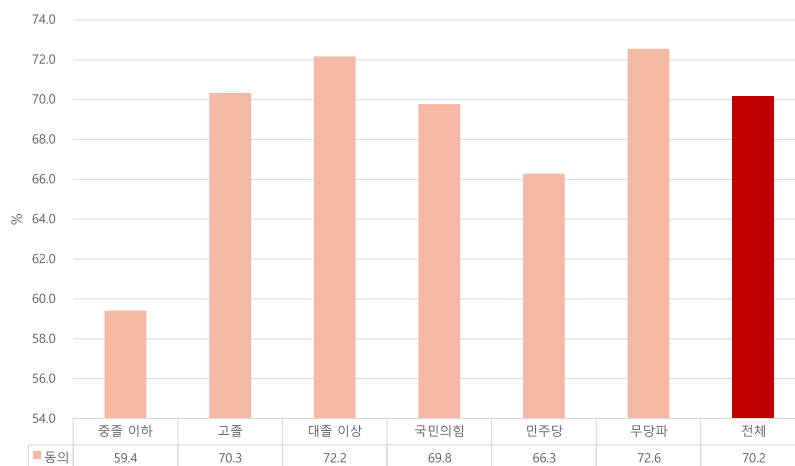
남성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수준 높을 수록 동의율 높음
- 무당파 동의율이 높음
- 성별 차이 없음
- 세대별로 젊은 세대 동의율 높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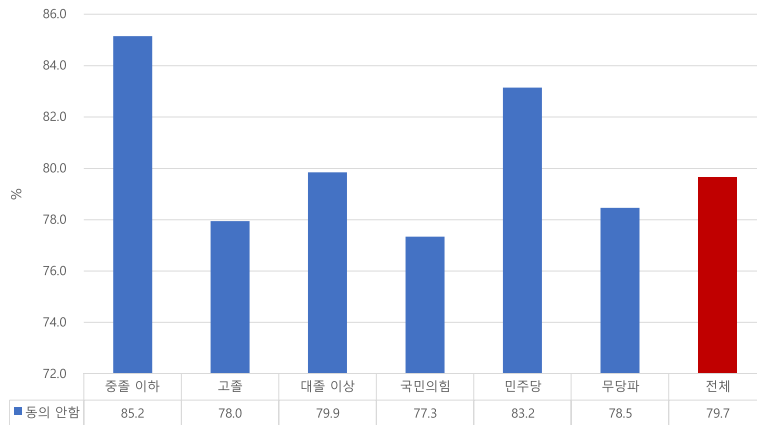
여성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수준 높을 수록 동의율 높음
- 무당파 동의율이 높음
- 성별 차이 없음
- 세대별로 젊은 세대 동의율 높음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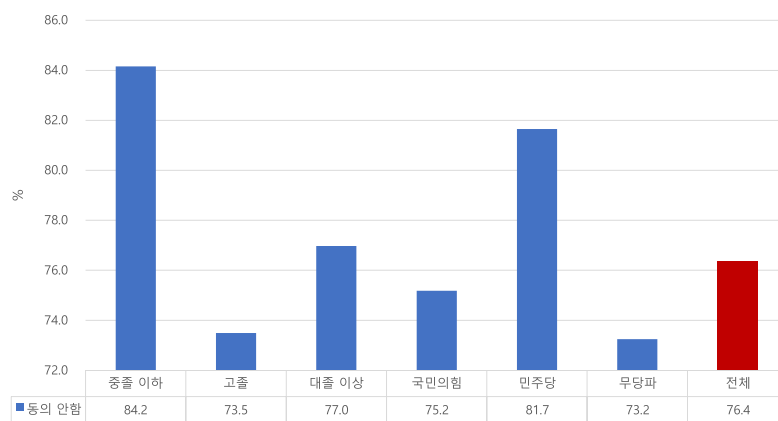
성인 남성은 노예 상태나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있다



- 중졸이하의 비동의율 높음
- 전쟁세대의 비동의율이 가장 높음
- 민주당 비동의율 높음
- 성별차이 없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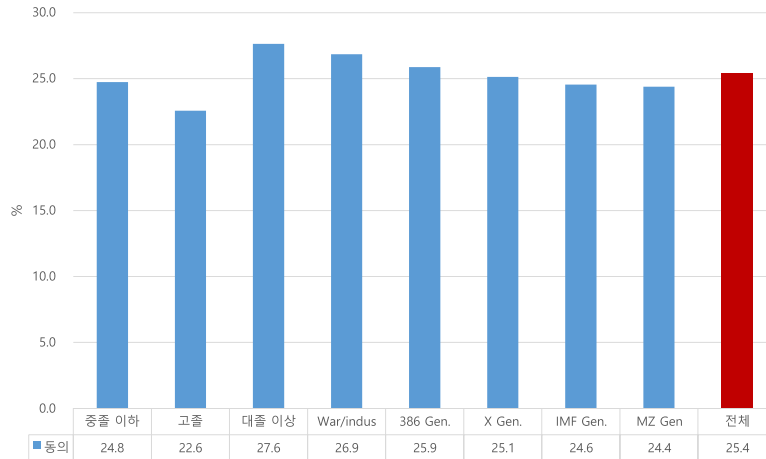
성인 여성은 노예 상태나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있다



- 중졸이하의 비동의율 높음
- 세대별 차이 없음
- 민주당 비동의율 높음
- 성별차이 없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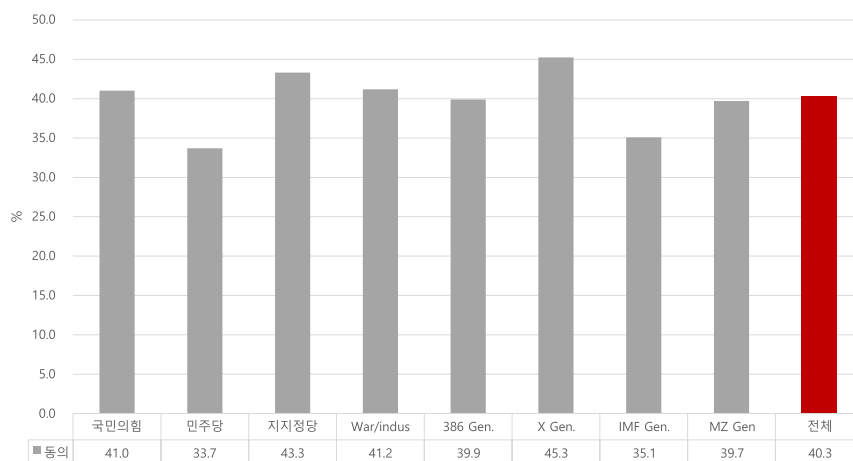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대졸자들의 동의율 높음
- 세대별 차이 없음
- 정당별 차이 없음
- 성별차이 없음

25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 학력별 차이 없음
- X 세대가 동의율 높고 IMF 세대가 낮음
- 국민의힘 > 민주당
- 성별차이 없음

26

평등

- 물질적, 비물질적 평등

- 모든 사회집단의 정치 참여, 의제설정,
정치 권력 행사에서의 평등한 기회

- 건강, 교육, 소득의 평등

27

평등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여성의 정치적 권리

- 여성들은 공직 출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74.6% 동의
- 이대남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대한 태도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저학력층, 고연령층에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는 본인들의 경험과 소외가 투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른바 "역차별"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기호를 갖는다"와 같은 문항을 차후 조사에서 검증할 필요성 있음.

28

평등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정부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상당한 불만
 -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45.1% 동의
 -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49.5% 동의
 -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국민들이 경제적 계급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
 -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불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불공정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29

평등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정부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상당한 불만
 - 빈부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차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와 대우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
 - 고학력자, 민주당 지지자, IMF 세대에서 특히 경제적 계급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반면, 민족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차이가 거의 없음.

30

평등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한국사회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사람들이 의식주와 같은 생활 기본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76.8% 동의
 -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생존이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빈곤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음.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부격차로 인한 정부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상존.
 - 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의 문제가 더 큰 사회불만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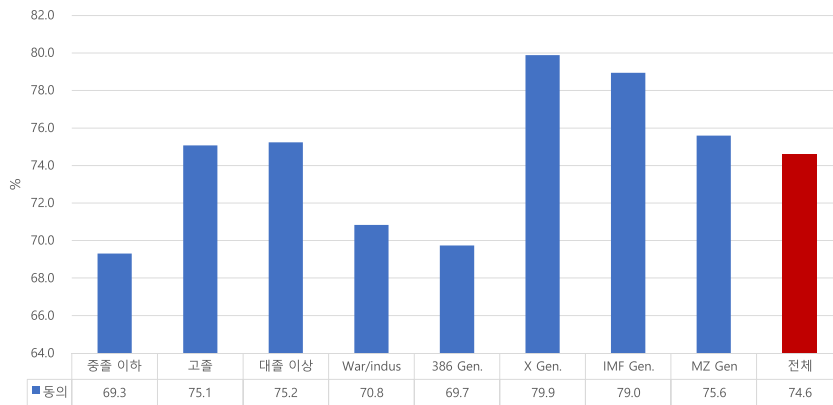
31

평등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한국 사회에서 권력이 소수집단에 집중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발견됨
 - 권력은 성별과 상관 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37.6% 동의
 - 권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 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25.4% 동의
 - 권력은 언어, 민족, 종교, 인종, 지역과 같은 사회 집단에 상관 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23.8% 동의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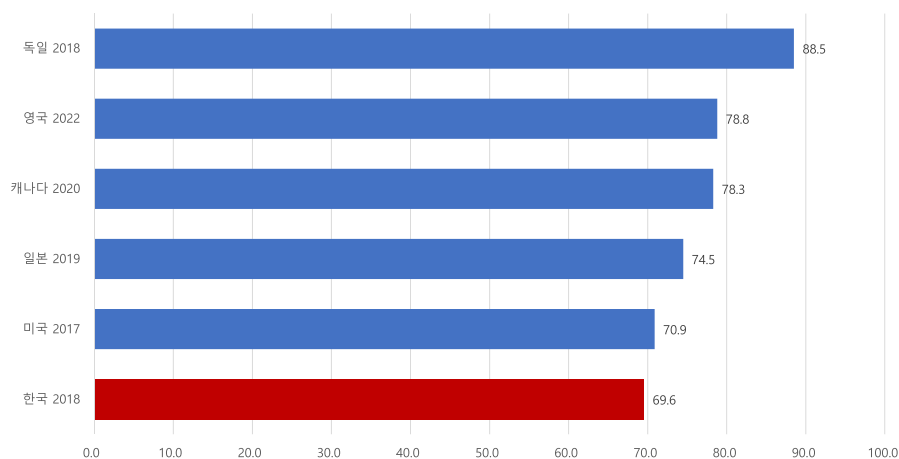
여성들은 공직 출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 중졸이하 학력의 비동의 비율 높음
- 정당별 차이 없음
- 386세대 동의율 낮음
- 성별차이 없음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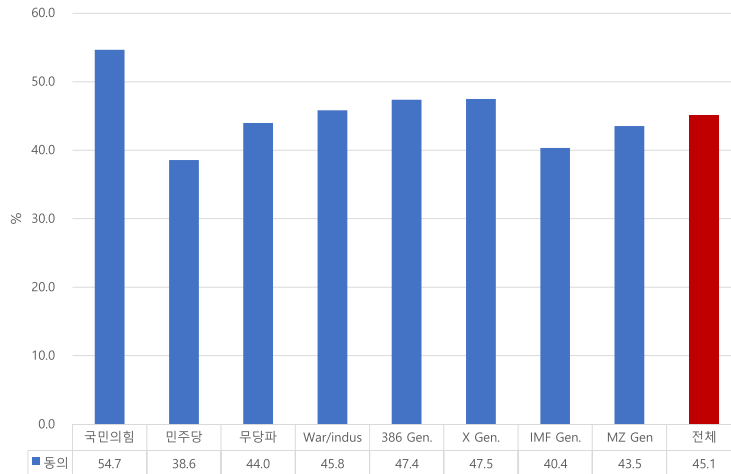
여성들은 공직 출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 World Value Survey 같은 문항의 국가별 비교
- 위 문장에 "동의" 한 비율을 그래프에 표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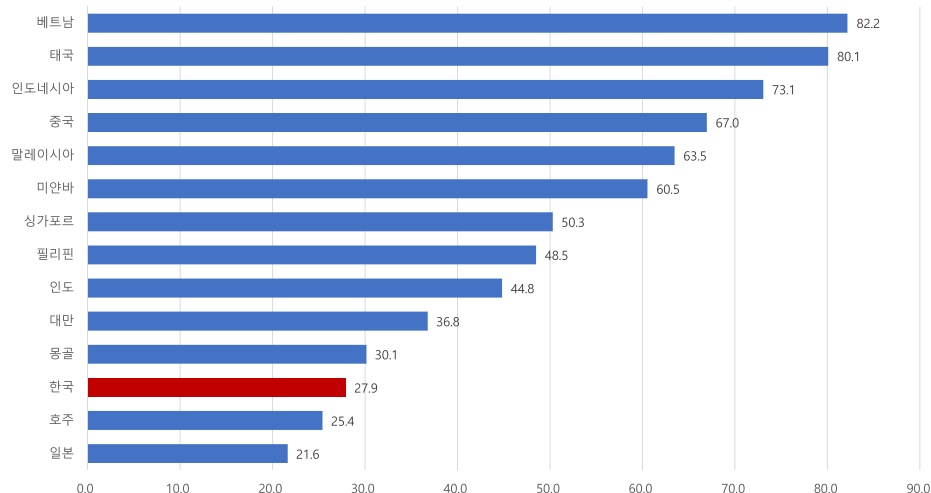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대졸자 동의율 높음
- 민주당 동의율 낮음
- IMF세대 동의 비율 낮음
- 성별차이 없음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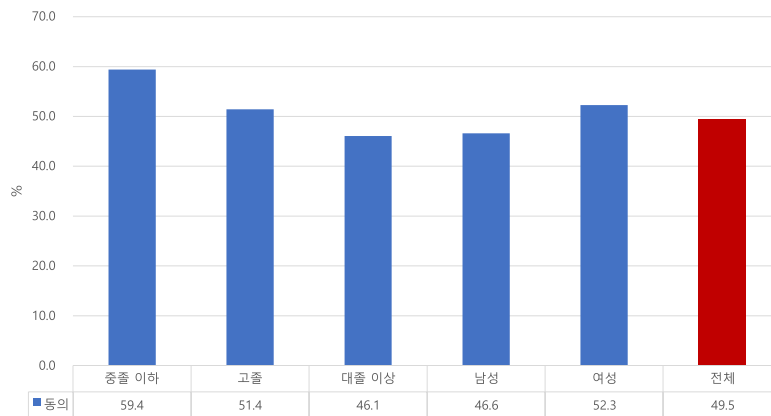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ABS Wave 5 조사 국가별 비교
- 위 문장에 "동의" 한 비율을 그래프에 표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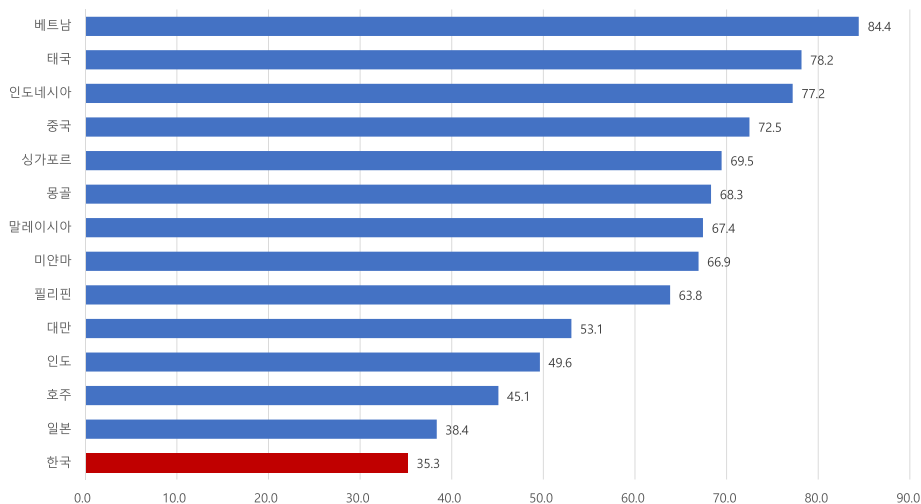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대졸 이상 동의율 비율 낮음
- 정당별 차이 없음
- 세대별 차이 없음
- 남성 동의율 낮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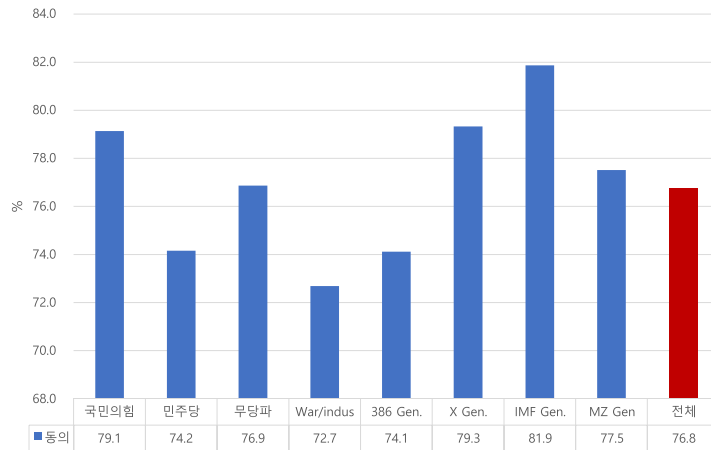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ABS Wave 5 조사 국가별 비교
- 위 문장에 "동의" 한 비율을 그래프에 표시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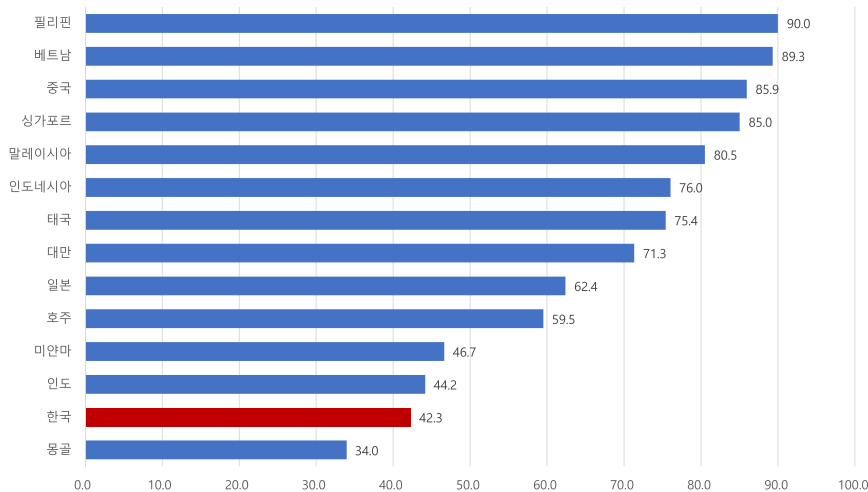
사람들이 의식주와 같은 생활 기본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 학력별, 정당별, 성별 차이 없음
- 전쟁세대 동의율 낮음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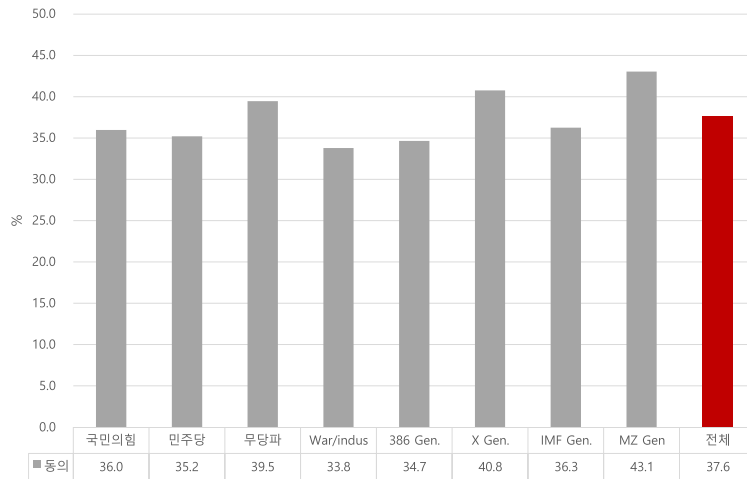
사람들이 의식주와 같은 생활 기본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 ABS Wave 5 조사 국가별 비교
- 위 문장에 "동의" 한 비율을 그래프에 표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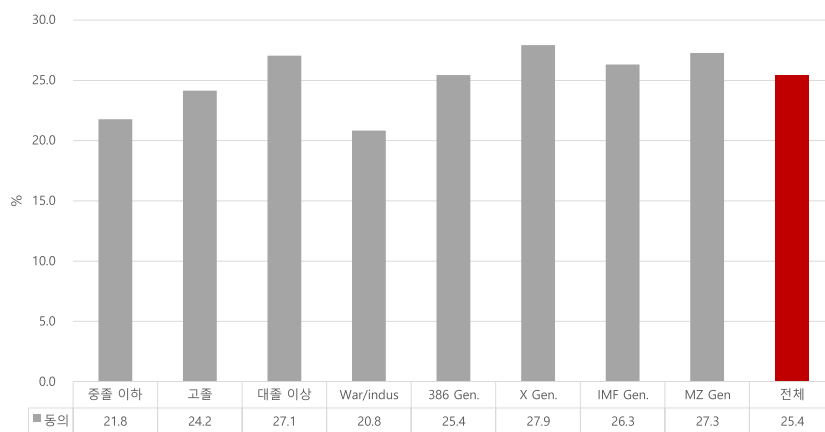
권력은 성별과 상관 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 학력별, 정당별, 성별 차이 없음
- 전쟁세대 동의율 낮음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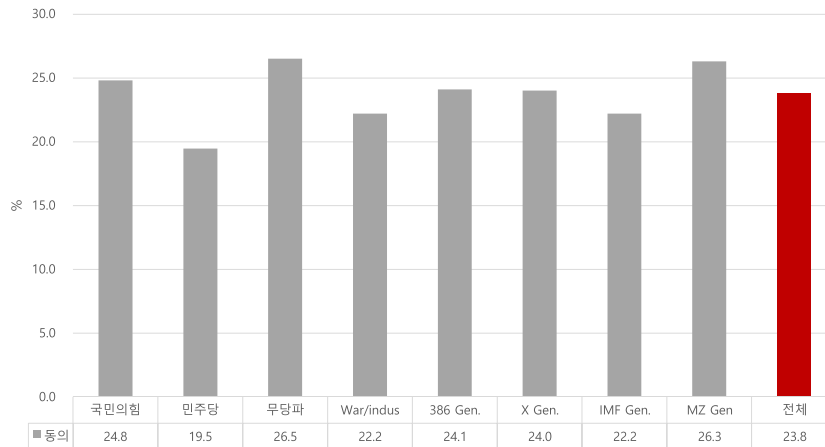
권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 없이 대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 대졸자 동의율 높음
- 정당별, 성별 차이 없음
- 전쟁세대 동의율 낮음

42

권력은 언어, 민족, 종교, 인종, 지역과 같은 사회 집단에 상관 없이 대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 학력별, 성별 차이 없음
- 민주당 동의율 낮음
- 전쟁세대 동의율 낮음 / MZ 세대 동의율 높음

43

숙의 - 존중과 이성에 기반한
정치적 대화와 토론

- 정치적 결정이 감정이나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44

숙의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숙의 과정에서 반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다수
 - 반론 처벌: 4.9%, 반론 무시: 24.5%, 반론 폄하: 41.6%
 - 부정응답 합계 71%
- 숙의과정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참여 제한적
 - 토론 불허: 4.4%, 토론 제한: 24.7%, 토론 희박: 29.1%
 - 부정응답 합계 58.2%
- 숙의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합리적 근거 제시 부족함이 지적됨
 - 근거제시 없음: 20.1%, 비논리적 근거: 43.6%
 - 부정응답 합계 63.7%

45

중요한 정책 변경을 고려할 때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반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반론 처벌	49	4.9
반론 무시	246	24.5
반론 폄하	417	41.6
반론 인정	166	16.6
반론 가치부여	106	10.6
반론 수용	19	1.9
합계	1,003	100.0

1=반론이 허용되지 않거나 반론을 제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2=반론은 적어도 일부 당사자에게는 허용되지만 거의 항상 무시된다
 3=반론을 인정하지만 반론이나 반론을 제안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반론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4=반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반론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5=거의 항상 반론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반론을 대부분 거부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6=거의 항상 반론을 인정하며 종종 반론을 수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46

중요한 정책 변경이 고려되고 있을 때, 대중적 토론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독립적입니까?

	빈도	%	
토론 불허	44	4.4	1=대중적 토론이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토론 제한	248	24.7	2=일부 제한적인 대중적 토론이 허용되지만 엘리트층 이하의 대중은 주요 정책 토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토론 희박	292	29.1	3=대중적 토론이 억압되지는 않지만 드물고, 대체로 엘리트들이 비엘리트 행위자들을 통제하거나 제약한다
전문가 토론 장려	254	25.3	4=공론화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일부 자율적인 비엘리트 그룹이 참여하지만, 이슈 분야에 상관 없이 동일한 소수의 전문 그룹에 국한되어 있다
대중 토론 장려	134	13.4	5=대중적 토론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비교적 광범위한 비엘리트 그룹이 참여하며 이슈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전면적 토론참여	31	3.1	6=다수의 비엘리트 그룹과 일반인이 미디어, 협회 또는 동네, 거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풀뿌리 토론이 일반적이며 대중적 토론에 제약이 없다
합계	1,003	100.0	

47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근거제시 없음	202	20.1	1=대체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비논리적 근거	437	43.6	2=주장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거짓 근거를 대는 경향이 있다
단순 근거	281	28.0	3=주장에 대한 단순한 근거를 제시한다
합리적 근거	83	8.3	4=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검증된 근거를 제시한다
합계	1,003	100.0	

48



재단법인 **한국회발전연구회**